

본 자료는 보험연구원이 2019년 금융정책 방향에 대해 작성한 자료로서,  
금융위원회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함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.

## 2019년 보험 정책 방향

## 목차

---

- I. 보험산업 현황과 이슈
- II. 보험정책 평가
- III. 2019년 정책 제언

# I. 보험산업 현황과 이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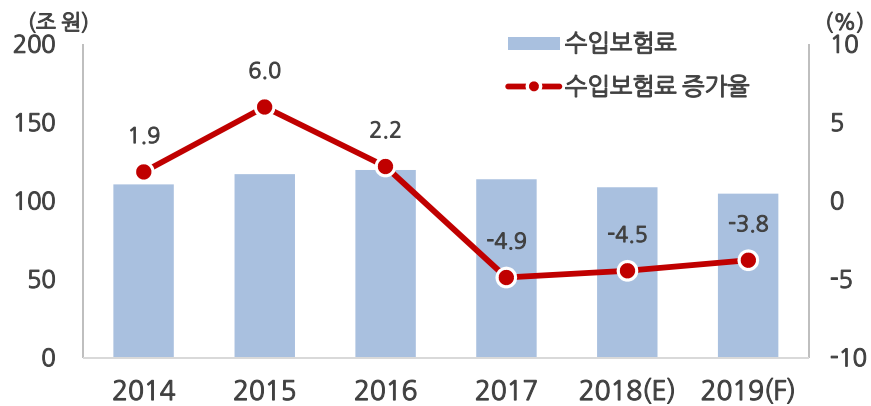
---

1. 보험산업 현황
2. 보험산업 주요 이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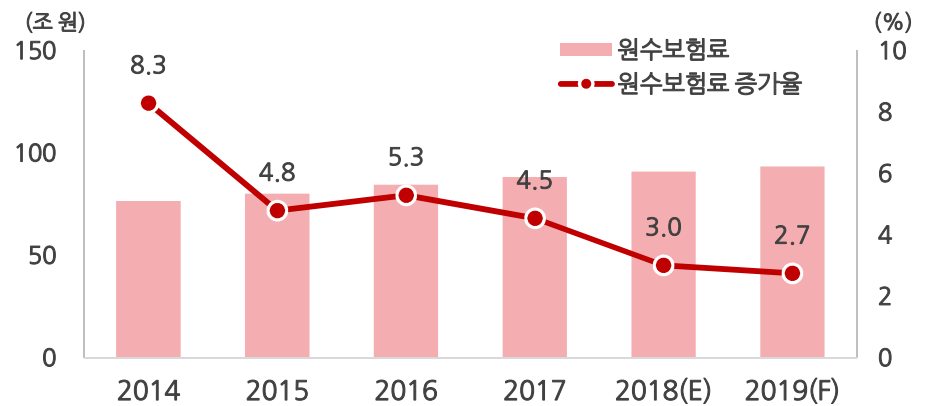
# 1. 보험산업 현황

- 수익성이 정체된 가운데 성장세가 둔화
  - 생명보험은 수입보험료가 감소하고 있으며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도 둔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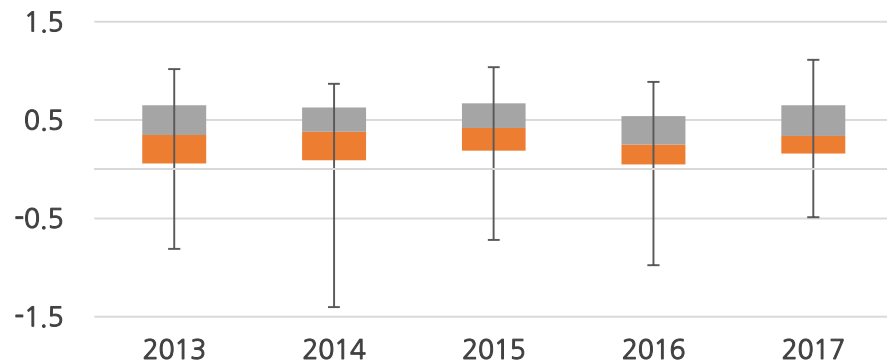
## 생명보험 수입보험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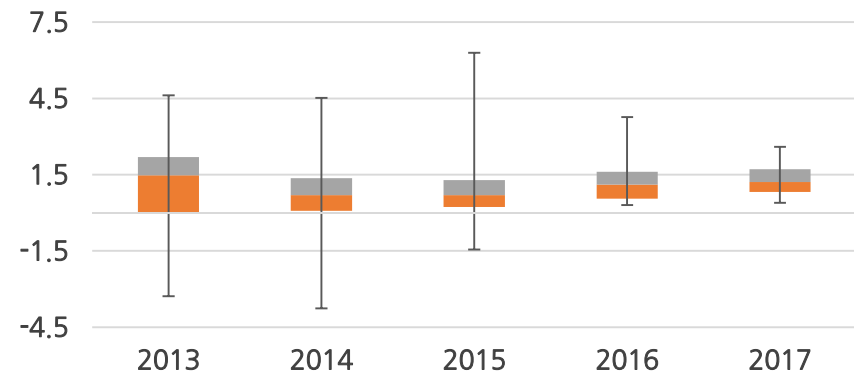
## 손해보험 원수보험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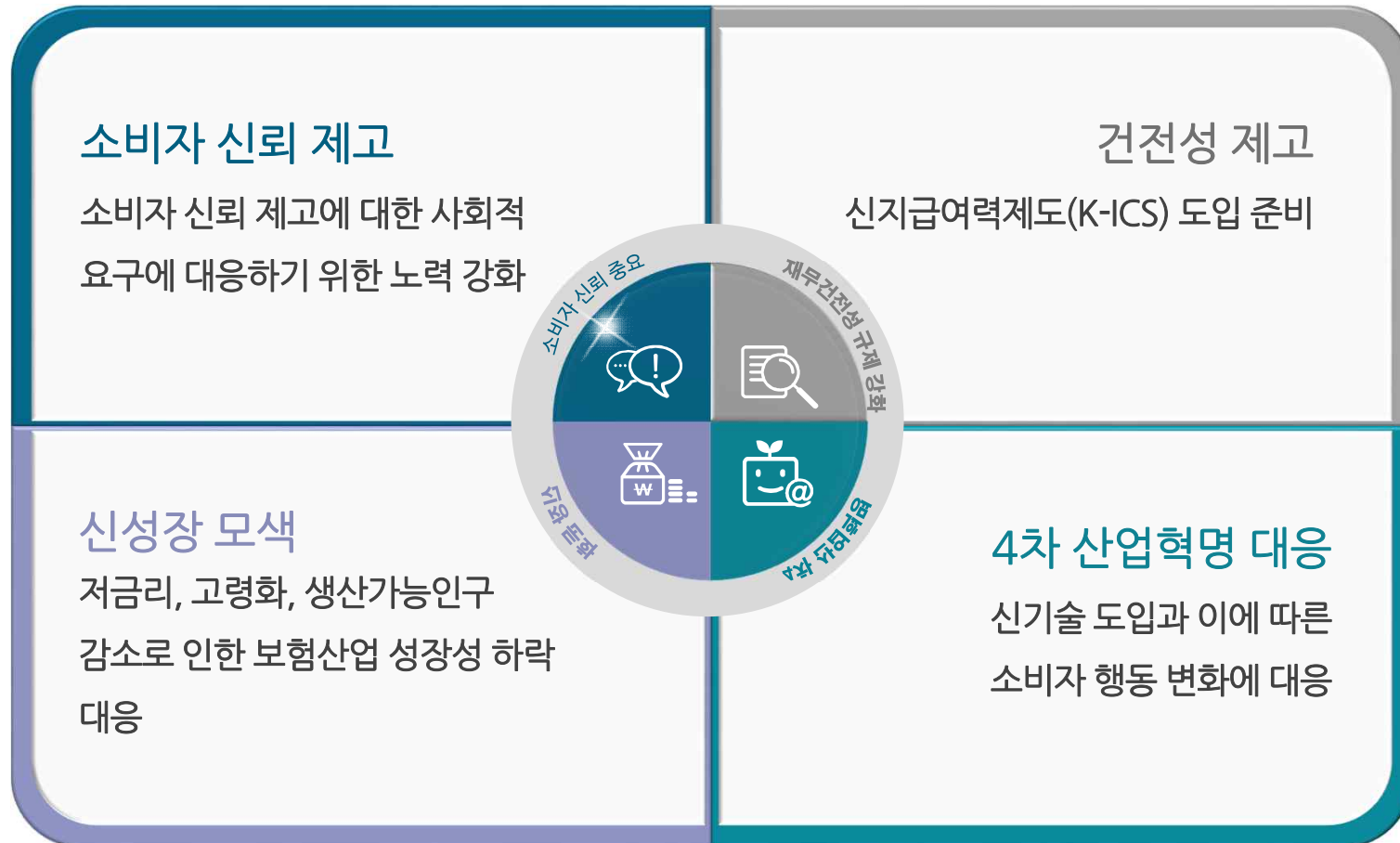
## 생명보험 수익성



## 손해보험 수익성



## 2. 보험산업 주요 이슈



## II. 보험정책 평가

---

1. 2018년 보험정책 - 내용
2. 2018년 보험정책 - 평가

# 1. 2018년 보험정책 - 내용

- 2018년 주요 보험정책은 (1) 소비자 보호, (2) 건전성 제고, (3) 경쟁 및 혁신을 위한 정책

## 소비자 보호

-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(3월, 4월)
  - 가입 부담 완화 및 취약계층 가입확대
    - ※ 개인-단체 실손 연계, 노후실손 전환 허용, 유병력자 실손 도입
- TV홈쇼핑 보험광고 개선 (9월)
  - 소비자의 이해도를 개선하여 불완전 판매 유인 축소
    - ※ 법률 및 의료 용어를 쉽게 개선, 글자크기 확대, 음성 설명문자 활용 등

## 건전성 제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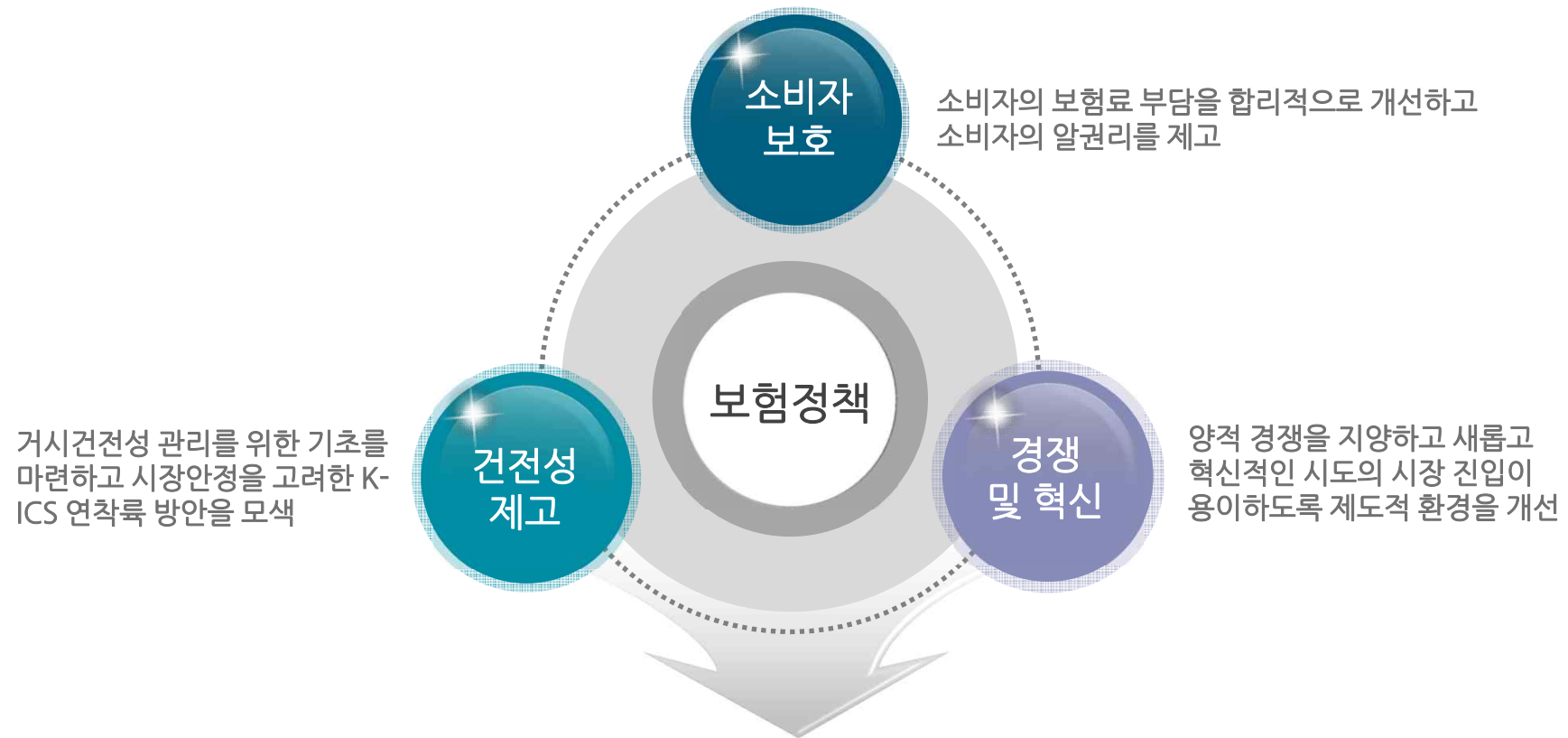
- 금융그룹 통합감독 (7월)
  -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국제규범의 이행과 기업집단 소속 금융그룹의 동반부실위험을 관리
    - ※ 「금융그룹 통합감독」 모범규준 확정 및 시범운영
- 비은행 거시건전성 관리 (9월)
  - 보험 등 비은행권 시스템리스크 유발 및 전이 가능성에 유의
    - ※ 국제적 논의 중인 총체적 감독체계(Holistic Framework, 행위 단위 중심의 거시건전성 감독) 검토
-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(11월)
  - 신지급여력제도 (K-ICS) 연착륙 모색 및 거시건전성 제고
    - ※ 보험회사 新지급여력제도(K-ICS) 로드맵 재검토, 자본확충, 자산운용 규제개선 추진

# 1. 2018년 보험정책 - 내용(계속)

## 경쟁 및 혁신

- 진입규제 개편 (5월)
  - 소액단기보험, 온라인 전문보험, 특화보험사 활성화
    - ※ 보험산업 경쟁도 주기적 평가, 인가절차 정보 제공, 진입과정 투명성 제고 추진
- 손해보험 혁신발전방안 (1월, 6월)
  - 1단계 : 국민 실생활 밀착형 보험 활성화
    - ※ 전자금융업자의 간단보험 판매 허용, 소액 간단보험 규제 정비 추진
  - 2단계 : 기업성 보험의 보험료와 서비스 경쟁 촉진
    - ※ 기업보험 위험평가 역량 제고, 재보험 감독체계 개선, 손해보험시장 인프라 확충 등 추진

## 2. 2018년 보험정책 - 평가



향후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적절한 후속조치가 매우 중요  
- 실손보험 공·사협력 방안, K-ICS 연착륙 방안, 손해보험 인프라 확충 등 구체화

### III. 2019년 정책 제언

---

1. 개요
2. 소비자보호
3. 건전성 제고
4. 4차 산업혁명 대응
5. 보험의 역할 제고

# 1. 개요



## 2. 소비자 보호 : ① 금융 소비자 보호법 도입 준비

### 검토배경

-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에 대비 하위법령 및 해석 지침 등 후속 세부운영방안 마련 필요
  - 금소법은 동일기능-동일규제 원칙하에 전 금융권역을 기능별로 분류하여 규제
    - ※ 금융상품 기준: 예금성, 투자성, 보장성, 대출성 / 판매업자 기준: 직접 판매업자, 판매 대리·중개업자, 자문업자
  - 개별 규제의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권역별 상품 및 영업환경을 고려한 입법 및 해석 필요
    - ※ 6대 판매행위 원칙: 적합성 원칙, 적정성 원칙, 설명의무, 불공정영업행위금지, 부당권유금지, 광고규제

### 추진방안

- 보험회사의 영업행위 및 민원처리 등에 영향을 미칠 주요 쟁점별 구체적인 적용 방안 도출
  - ※ 보장성 상품 관련 수수료(모집수수료)의 고지 방법과 정도,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는 보장성 상품의 범위, 청약철회권 적용 대상인 대출상품(약관대출)의 범위, 소액분쟁사건 특례대상 금액 등
  - ※ 보장성 보험상품의 적합성·적정성 판단기준, 계약해지비용(위법계약해지권 관련)의 해석 등에 대한 구체적 지침 필요

## 2. 소비자 보호 : ② 보험약관 관련 분쟁 감소 방안

### 검토배경

- 보험약관 해석 관련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
  - 불완전판매비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, 소비자 체감도는 낮은 상황
    - ※ 불완전판매비율: 생명보험 1.24%('11) → 0.18%('17), 손해보험 0.41%('11) → 0.1%('17)
  - 보험상품의 전문성, 복잡성 등으로 약관의 이해가 어렵다는 지적

### 추진방안

- 보험약관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 제고와 보험약관 관련 분쟁 감소 방안 검토
  -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결과 활용
    - ※ 분쟁이 많은 보험약관에 대한 이해도 평가 실시, 평가결과 반영 여부 피드백
  - 분쟁 사례 분석을 통한 개선조항 발굴
    - ※ 분석 결과를 보험약관 작성 및 보험금 지급 시 반영
  - 보험약관 체계 변경
    - ※ 일반적인 조항과 특유한 조항 분리, 소비자에게 중요한 조항 약관 전면 배치 등
  - 약관 서두 및 보험안내자료 활용
    - ※ 실생활 용어로 설명, 그림과 만화 활용, 중요한 부분 강조 표시

### 3. 건전성 제고 : ① 시장안정과 K-ICS 도입 준비

#### 검토배경

- K-ICS 도입과 관련 국내 보험회사 수용성과 거시건전성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
  - 시가평가를 적용하고 위험민감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재무건전성 강화 추진
  - K-ICS 시행 시 경제환경에 따라 상당수 보험회사가 지급여력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 발생 가능
    - ※ 저금리 환경 지속과 자산-부채 듀레이션 갭으로 가용자본 감소 및 요구자본 증가
  - K-ICS 도입준비에 따른 보험회사 자산운용·자금차입 쏠림 등 동조성이 커지는 상황

#### 추진방안

- 시장 불확실성을 줄이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
  - 신지급여력제도가 지향하는 목표와 현재와의 갭을 줄여나갈 경로 제시
  - 유럽은 Solvency II 시행 시 안정적인 정착과 시장 불안정 최소화 노력
    - ※ 기존 제도의 인정, 새 제도 적용 유예와 보완 장치
    - ※ 수 차례의 영향평가와 의견수렴과정을 통해 보험회사의 제도 수용 능력을 파악하고 보완 장치를 추가
    - ※ 누적된 저금리 효과를 고려하여 장기간에 걸친 자본확충 방안 제시

### 3. 건전성 제고 : ② 공제사업 건전성 규제 합리화

#### 검토배경

- 공제보험의 재무건전성이 관리되고 있지 않아 소비자 보호 및 불공정 경쟁 문제 발생 가능
  - 2014년 현재 80여 개 공제가 생명,손해보험 또는 보증보험을 제공
  - 2018년 현재 46개 이상의 민간 보증기관이 보증보험 제공
    - ※ 2017년 6월 기준 비금융 공제조합 보증보험 잔액은 165.2조 원

#### 추진방안

- 보험업법 개정 및 감독 일원화 등 제도 개선 검토(소관 부처와의 협력 필요)
  - 주요국의 경우 공제보험과 민간보험에 동일한 재무건전성 기준 적용
    - ※ EU : 공제조합법에 의해 공제 감독, 금융감독청이 지급여력 등 건전성 감독과 검사 실시
    - ※ 미국: 공제조합은 보험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아야 보험상품 판매 가능
    - ※ 영국: 공제조직에 대한 감독을 보험회사와 동일하게 FCA와 PRA가 담당
    - ※ 일본: 보험업법에 소액단기보험업을 허용하여 공제사업체를 보험업법에서 규율

## 4. 4차 산업혁명 대응 : ① 신기술 도입에 따른 규제 정비

### 검토배경

- 인공지능(AI), 로보어드바이저, 빅데이터 등 신기술 도입 시 기존 규제와 충돌 가능
-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소비자 접촉 및 보험판매 방식의 전환 필요성 증가
  -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기술로 인해 비대면 채널의 영향력 확대 가속화 전망

### 추진방안

- 신기술 도입 시 기존 규제와 충돌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법률검토와 사전 영향평가
  - 신기술을 이용한 지나친 보험료 세분화 시 보험료 차별 논란
  - 보험료 세분화를 위한 정보 수집 시 개인정보보호 문제
  - 신기술에 의한 불완전판매 시 책임소재 문제
- 대면채널 중심의 규제를 개선하여 비대면채널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 조성
  - 채널의 성격에 맞는 설명의무 부과, 소액단기보험 인증절차를 간소화

## 4. 4차 산업혁명 대응 : ② 공유경제 관련 보험상품 준비

### 검토배경

- 기획재정부는 2019년 16대 중점 추진과제로 숙박공유, 카셰어링 등 공유경제 활성화 제시
  - 공유경제는 IT 플랫폼을 매개로 한 유희자산의 시장거래를 의미
    - ※ 우버는 승차공유 서비스를 매개하는 플랫폼, 에어비앤비는 숙박공유 서비스를 매개하는 플랫폼
  - 유희자산의 효율적 활용이 기대되나 재산피해나 배상책임발생 등의 우려

### 추진방안

- 보험상품 미비로 공유경제 발전이 저해되지 않도록 보험상품, 요율 등 사전 준비
  - NAIC는 공유경제하에서 보장공백에 대해 정책 권고를 하기 위해 2014년 워킹 그룹 조직
    - ※ NAIC(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ers : 미국 감독자 협의회)
  - 미국의 Slice는 숙박공유 제공 집주인을 상대로 단기(숙박공유 서비스 제공 기간) 보험상품 제공
    - ※ 에어비앤비는 플랫폼에 가입한 집주인을 대상으로 보험 제공, United Specialty Insurance Company가 인수

## 4. 4차 산업혁명 대응 : ③ 사이버보험 활성화

### 검토배경

- 현재 사이버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나 사이버보험 가입률은 저조함
  - 수요 측면 제약요인: 사이버보험에 대한 인식 부족, 약관 용어의 비표준화
  - 공급 측면 제약요인: 사이버 사고 데이터 부족, 재앙적 사고의 발생가능성
  - 국내 사이버보험 정책은 주로 제3자 피해배상 관련 의무화를 중심으로 추진
    - ※ 전자금융거래법, 신용정보법, 정보통신망법 등에 배상수단 의무화 조항 도입

### 추진방안

- 보험회사의 사이버 위험 평가능력 제고와 거대 위험 분산을 위한 정책 마련
  - 정부-업계(보험업계 및 보안업계)-학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프로젝트 진행
    - ※ 싱가포르: 사이버위험 관리 시스템 및 사이버보험 상품 개발을 위해 정부-업계-학계 공동 프로젝트(CyRim) 추진
  - 재앙적 사고 위험의 분산을 위한 사이버보험 풀(Cyber Insurance Pool) 구축
    - ※ 싱가포르: 세계 최초로 사이버보험 풀 구축 계획을 발표
  -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 검토
    - ※ 미국: 사이버보험 가입 및 NIST 보안 가이드라인 준수 시 세액공제 혜택 제공 법안 발의

## 5. 보험의 역할 제고 : ① 다양한 보장 수요 대응

### 검토배경

- 2018년 손해보험 혁신발전방안 실행 및 후속 조치 필요
    - 소액 단기보험 시장 확대를 위해 신규 공급자의 시장 진입을 적극 허용할 필요
  - 다양한 보장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나, 인프라 기반 부족이 시장 확대 걸림돌
    - 제조물 결함, 의료사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구제에 대해 배상책임보험 활용 확대 필요
    - 반려동물 보유가구의 급속한 증가로 관련 보험상품의 수요 확대
- ※ 반려동물 보유가구 비중: 2012년 17.9% → 2015년 21.8% → 2017년 28.1%

### 추진방안

- 소액 단기보험업 도입을 위한 보험업법령 개정
  - ※ 보험기간·보험금상한·연간보험료상한 기준 설정, 최저자본금 완화 등
- 다양한 보장 수요 확대에 대응한 제도 정비
  - 기업의 제조물 결함 및 의료기관의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제도 강화
    - ※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적정 보상한도 설정 의무화, 의료배상책임 의무보험제도 도입
  - 반려동물 보유가구의 부담 완화 및 반려동물 사고에 대한 제3자 보장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
    - ※ 반려동물 식별 장치 내장칩 일원화, 동물병원 진료 표준화, 사전 예방 부가서비스 특별이익 대상 제외

## 5. 보험의 역할 제고 : ② 고령화 시대 대응

### 검토배경

- 급속한 고령화 과정에서 공적보험을 보완할 민영보험의 역할 미미
  - 65세 이상 인구 급증, 치매 유병률 상승 등 고령층 의료비 증가 대응 필요
    - ※ 2017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 약 28조, 전체진료비 약 69조의 40.9%
  - 고령화와 생활수준 향상으로 건강생활서비스에 대한 관심 증가와 ICT와의 제휴 확산
  - 공적연금 확대 논의에도 불구하고 재정여력 고려 시 사적연금 확대 필요

### 추진방안

- 민영보험 및 사적연금 등 민영시스템 재정비를 통한 고령사회 대응
  - 해외 사례(독일, 프랑스, 미국, 일본 등) 검토를 통한 민영장기요양보험 활성화 모색
  - ITC 기술을 기반으로 건강관리서비스와 고령자 건강보험(노후실손의료, 간편심사, 장기간병 등) 연계
    - ※ 노인 10명 중 9명 이상이 1개 이상 만성질환 보유, 절반 이상은 2개 이상 만성질환 보유
- 취약계층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공·사연계연금 도입

감사합니다

---